

‘AI 기본법’ 시행 코앞… 모호한 규제에 업계·시민 뿔났다

시행령 입법예고 한 달여 앞두고
업계 “포괄적 규제 뿐… 사형선고”
시민사회단체 “시민 권리구제 제외”
과기정통부, 이달 22일까지 의견수렴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둔 정부의 일방 통행 방침에 업계는 “사형선고”를,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면죄부”를 외치고 있다. 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은 산업도 시민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채 출발선에 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1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기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AI 업계와 시민사회계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AI 업계, 특히 스타트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사 중 무려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 (48.5%), “법령



한국이 내년 1월 22일 세계 최초 인공지능(AI)에 관한 규제 법안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ICT업계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법안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 (48.5%) 등도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대기업과 달리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의무만 떠안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를 법 시행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연 AI 기본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AI 생성물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해 AI로 제작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영상물은 물론, 이미지와 텍스트 등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이 코앞인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커녕 포괄적인 규제 내용만 들려와 막막하다”며 “특히 텍스트나 이미지까지 일일이 식별 표시를 강제하는 건 서비스 사용자 경험(UX)을 심각하게 해치고, 기술적 대응 여

력이 없는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피해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일본은 법적 강제 대신 ‘자율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올가미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기업들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법 시행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 21개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본법이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데 치중하느라 정작 AI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 구제 절차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AI 채용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AI 의료 시스템 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개인은 법적 보호 대상인 ‘이용자(기업·기관)’가 아닌 ‘영향받는 자’에 해당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채용 면접자나 환자 같은 일반 시민들은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영향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권리 및 구

제 조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고, 시행령에서 규제 대상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법은 시행령 제23조는 법 32조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연산량이 챗GPT-4 이상의 거대언어모델(LLM) 수준이라는 점이다. 즉, 사실상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닌 국내 인공지능사업자는 없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seoh@metroseoul.co.kr

챗GPT, ‘콘텐츠·소프트웨어’ 연합 vs 제미니, ‘자체 생태계’ 강화

AI ‘2강 체제’ 재편

구글 ‘제미니3’, 가파른 상승곡선
AI 에이전트 탐색시대 전환 주도

오픈AI ‘위기감’… GPT-5.2 조기 출시
디즈니 라이선스 계약, 어도비 제휴

구글 ‘제미니3’의 약진으로 인공지능(AI) 챗봇 시장이 ‘챗GPT’ 독주 체제에서 ‘2강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사내에 ‘코드 레드(Code Red)’를 선언하고, ‘GPT-5.1’ 출시 불과 한 달 만에 성능을 대폭 개선한 ‘GPT-5.2’를 내놓으며 맞불을 냈다. 2년 전 챗GPT의 등장에 비상등을 켜던 구글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 2025년 연말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14일 아이지아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생성형 AI 시장은 여전히 챗GPT가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된 모습이다. 챗GPT의 주간활성이용자(WAU)는 12월

첫째 주 기준 약 875만 명으로 선두를 지켰으나, 주간 신규 설치 건수는 3주 연속 감소세(20만→19만 건)를 보였다.

반면, 구글 제미니3는 지난달 17일 ‘제미니3’ 출시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출시 직후 주간 신규 설치 건수가 5만 건에서 11만 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고, WAU 역시 1만6000명대에서 2만 명 대로 올랐다.

글로벌 트래픽 추이도 심상치 않다. 시장조사업체 시밀러웹 분석 결과, 1년 전 87%에 달했던 챗GPT의 트래픽 점유율은 이달 71.3%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제미니3는 5.7%에서 15.1%로 몸집을 3배 가까이 불렀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챗GPT 유료 이용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AI 친숙 시장”이라며 “국내 지표의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장 판도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구글의 추적이 거세지자 오픈AI는 11일(현지시간) 예정보다 앞당겨 ‘GPT-5.2’를 출시했다. 샘 올트먼 CEO가 제미니3 프로의 성능을 확인한 뒤 출시 일

정을 월말에서 중순으로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GPT-5.2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일상적 대화용 ‘즉답(Instant)’ ▲코딩·수학 등 복잡한 작업용 ‘사고(Thinking)’ ▲고난도 심층 추론용 ‘프로(Pro)’ 등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오픈AI가 공개한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GPT-5.2는 주요 지표에서 제미니3를 다시 앞서거나 대등한 수준을 확보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SWE) 평가에서는 80%를 기록해 제미니3 프로(76.2%)를 제쳤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픈스 4.5(80.9%)와도 대등한 성능을 보였다.

특히 ‘인간의 마지막 시험’이라 불리는 박사급 추론 능력 평가(HLE)에서도 구글을 사용한 경우 50%의 정답률을 기록해 제미니3 프로(45.8%)를 따돌렸다. 전문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도 프로 모드가 74.1%를 기록하며 인간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환각’ 현상도 개선됐다. 내부 테스트 결과 사고 모드의

오류율은 6.2%로 전작 대비 약 30%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연령 예측 모델을 도입해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도 높였다.

오픈AI는 이번 5.2 버전 출시에 그치지 않고 내년 1월 또 다른 신규 모델 공개를 예고하며 기술 격차 벌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존 버전인 GPT-5.1은 3개월 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생성형 AI 시장이 2강 체제로 재편되면서, 양사의 기술 경쟁은 속도전과 함께 디테일한 사용자 경험(UX) 싸움으로 확장할 전망이다.

오픈AI는 구글의 인프라 우위에 맞서 글로벌 콘텐츠·소프트웨어 기업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반(反)구글 동맹’ 전략을 꺼내 들었다. 최근 월트 디즈니와 3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마블·스타워즈 등 200여 핵심 IP를 자사 영상 생성 AI ‘소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어도비의 제휴를 통해 챗GPT 내에서 포토샵·애크로벳 기능을 직접 구동하는 환경을 구현했다. 이는 검색 엔진과 유튜브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보유한 구글에 대항

해, 부족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외부의 ‘슈퍼 IP’ 및 전문 툴과 결합하여 보완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검색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제미니3 답 리서치’를 전격 공개하며 생태계 굳히기에 나섰다. 제미니3 프로를 기반으로 한 이 도구는 단순한 질문-답변을 넘어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검증하는 자율형 에이전트다.

구글은 이를 자사 검색·금융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통합해 ‘사람이 검색하는 시대’에서 ‘AI 에이전트가 탐색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개발자들에게 API를 전면 개방함으로써 구글 중심의 AI 생태계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AI가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자사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자체 생태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누가 더 대체 불가능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현 기자

팀네이버, 글로벌 버티컬 AI 스타트업 육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 아라비아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버티컬 AI 스타트업 육성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 기술

을 활용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산업별로 적용 가능한 버티컬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고도화를 돕는 데 협력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각 사의 기술 및 기업 발굴 역량을 연계해 AI 적용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을 선발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버티컬 AI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공모전과 멘토링 등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X’와 클라우드 인프라 등 AI 기술 활용 환경도 지원된다.

또한 네이버 아라비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시장 관련 정보 제공과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 연계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LG U+, ‘구글 AI 프로’ 제휴상품 선택

이달 30일까지 반값 할인

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구글 AI 프로’ 제휴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이달 30일까지 ‘구글 AI 프로’ 모바일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월 1만4500원(50% 할인)에 제미니3와 2TB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이용

할 수 있다.

‘구글 AI 프로’는 제미니3를 비롯해 이미지 생성 모델 ‘나노 바나나 프로’, 동영상 제작 도구 ‘플로우&위스크’, 리서치 도구 ‘딥 리서치’, ‘노트북LM’ 등 구글의 주요 AI 기능을 포함한 월 정액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부가서비스 외에도 전용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